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전주컨벤션센터 건립공사 첫 발

옛 종합경기장 부지에 현장사무소 설치... 우범기 시장, 현장 찾아 전체 공정 안전관리 상황 점검

전주시 현안사업인 전주컨벤션센터 건립공사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사무실이 옛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들어선다. 특히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 전주컨벤션센터는 올 연말부터 현장사무실이 개소되고 내년 1월 중순경 착공 예정이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우범기 시장은 이날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내 전주컨벤션센터 건립사업 현장을 방문해 가설사무소 설치 과정과 전체 공정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MICE산업 육성의 핵심 기반시설인 전주컨벤션센터 건립이 본격화됨에 따라 초기 단계부터 안전을 최우선하는 현장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23일 옛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내 전주컨벤션센터 건립사업 현장을 방문해 가설사무소 설치 과정과 전체 공정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최근 타지역 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구조물 붕괴 사고를 거론하며, 공사 관계자들에게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주문했다. 특히 우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가설사무소 구축 상황과 근로자 안전 수칙, 비상대응체계 및 안전 장비 구비 여부 등을 세심하게 확인하기도 했다. 전주MICE복합단지 내 현장사무소는 총 1,800㎡ 부지에 건축면적 688.42㎡, 연면적 1,190㎡의 지상 2층 건물로 지어지며, 감리단·시공사 사무실과 실용심 회의실, 안전교육장 등이 들어선다. 현장사무소 내 안전교육장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자 안전교육이 이

는 호텔(4성급, 200실 이상 규모)과 상업시설인 판매시설, 문화시설(시립미술관, 한국문화원형콘서트체험전시관), G-Town(창업공간), 미래교육캠퍼스(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이 조성돼 컨벤션사업을 뒷받침하게 된다. 전주시는 향후 시공 과정에서 △ 단계별 안전 점검 강화 △현장 근로자 안전교육 확대 △품질·공정·안전 통합 관리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컨벤션센터 건립에 나설

방침이다. 우범기 시장은 "전주컨벤션센터는 향후 대규모 회의·전시 유치에 크게 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시설"이라며 "수많은 시민이 이용할 컨벤션센터는 무엇보다 안전하게 건립돼야 하며, 이를 위해 초기 공사부터 완공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시민이 자랑스러워할만한 랜드마크로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전북·제주·세종·강원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공동으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세종시 코트아드바이 메리어트 세종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 및 특별자치 포럼에 참석해 특별자치시도 현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를 비롯해 지방시대위원회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관련사건 3면> 정기회의에서는 △2025년 상생협력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서 국회 통과 촉구  
사업 추진 성과 보고 △2026년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주요 과제 논의 △차기 대표회장 추대(강원) 등을 의결하고,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성명서에서 4개 시도는 △전북·강원·제주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심사와 통과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특별자치시도 자치권 강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입법·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4개 시도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립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채 실질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별자치시도의 자치권 강화와 지역 발전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열린 특별자치 포럼에서는 '지방자치 30년, 특별자치의 새 길을 묻다'를 주제로 특별 강연과 정책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5급 3복 국가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특별자치시

도가 자치권을 실행하는 핵심 주체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내었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제주·세종·강원과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공동연구와 공동 입법 대응을 통해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강화와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 실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제도적 기반"이라며 "전북을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연대와 공동 대응을 통해 특별법 개정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 이 대통령과 국정기조 정책방향 '이심전심'

<李心傳心>

"전북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 주체로서 성장해야" 이원택 의원 인식과 일치... 전북 미래발전 청신호

이재명 대통령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이 국정기조와 정책방향을 놓고 생각과 마음이 관통하면서 이심전심이라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 (사진=이원택 의원실 제공)

조성과 주민주체형 에너지 모델을 꾸준히 제안해 온 의원의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산업 정책에서도 실용주의 노선이 공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념보다 성과와 실행을 중시하며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이는 '이심전심(李心傳心)'의 본래 뜻대로 뜻이 통한다는 것이지만 이 대통령과 이 의원의 철학과 생각이 비슷해 그 이상 개념인 '이심전심(李心傳心)'으로 바꿔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정책 또는 사업들과 다수의 지점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장차관 등 정부 부처 주요 관계자들에게 개혁의 주체는 지역임을 분명히 하며, 지역의 실행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국정 운영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이 국가 전략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성장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온 이원택 의원의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양측의 공통점이 두드러진다. 이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보급형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확산을 산업·일자리·지역경제와 연계된 국가 전략으로 제시했다. 새만금과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기존 제조업과 전통 산업의 구조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 역시 군산과 새만금 일대를 중심으로 조선·해양·항만 산업의 친환경 전환과 고부가가치 산업 재편을 강조하며, 국가 프로젝트와 지역 산업을 연계하는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해 왔다.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인식 또한 결을 같이하면서 최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K-컬처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수출과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 나왔다.

이 의원은 전북의 문화·자연·관광 자산을 기반으로 문화산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워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주요 공약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적 공통 분모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접근에서도 확인된다. 이 대통령과 이 의원 모두 선진적 구호에 그치는 균형발전이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산업·일자리 중심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저의 정책은 방향과 철학 면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이 대통령과의 이심전심을 통해 전북을 국가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